

대구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282
----------	------

제출연월일 : 2022. 3.

제 출 자 : 대구광역시장

1. 개정 이유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정보화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대구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대구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나. 지능정보사회 시책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10조)

○ 종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 실행계획은 매년 수립

○ 지능정보화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및 지능정보화책임관 지정

다.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15조)

○ 분야별 지능정보화 추진, 지능정보화 사업의 사전 검토 및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 통합전산센터의 설치·운영 및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라. 지능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제17조)

○ 정보격차의 해소 추진 및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 운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조 등(※ 붙임)

나. 예산조치 : 붙임 참조(2022년도 예산 기반영)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 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2. 28. ~ 3. 21.(21일)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

4) 갑질영향심사 : 개선의견(1건) 반영

- “정보취약계층”의 용어 정의와 관련하여 특정계층 기재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정보취약계층”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 해소 지원대상자임을 감안하여 용어변경 검토의견에 따라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용어 변경하고 관련규정 수정(안 제2조제6호, 제16조제2항)

5)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6)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불임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지능정보화 사업을 추진·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지능정보화부서”란 대구광역시의 지능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정보의 생산·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4. “지능정보사회”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산업·경제, 사회·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5. “지능정보제품”이란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6.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집적·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

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7. “정보격차”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회적·경제적·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
2.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3.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4. 시민의견 수렴·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응

제2장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4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대구광역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지능정보사회의 목표·전략 및 추진체계
3. 분야별 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
4. 정보의 공동활용·표준화
5.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6.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확산
7. 정보격차 해소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해소
8. 재원의 조달 및 운용
9.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확정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4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대구광역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지능정보화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① 지능정보사회 시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지능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의 평가 및 분석
3. 그 밖에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인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지능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실·국장
3. 지능정보화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능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제10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실·국장이 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지원 및 평가
2.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총괄, 조정, 지원 및 평가
3. 지능정보사회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시책 등과의 연계·조정
4.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의 체계적 작성·관리
6. 「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정보기술아키텍처”라 한다)의 도입·활용
7.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8.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9. 그 밖에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추진

제11조(분야별 지능정보화 추진) ① 시장은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의 편익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생활, 산업 등 각 분야를 대상으로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능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정보자원의 표준화와 공동활용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지능정보화 사업의 사전 검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업무의 지능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예산편성을 요구하기 전에 지능정보화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과 예산부서의 장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1. 지능정보화 사업의 타당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여부
 2. 타 사업과의 중복여부, 관련 법령·규정 준수 여부
 3. 소프트웨어 개발의 경우 자체개발 및 타 시스템 활용 가능 여부
 4. 지능정보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지능정보자원 공동활용 가능 여부
 5. 지능정보화 사업의 기술성, 경제성,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
- ③ 지능정보화부서의 장은 타당성 및 중복성 검토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민간기관·단체 및 외국의 정부·기관·단체와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4조(통합전산센터의 설치·운영) 시장은 지능정보화 시설을 통합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전산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① 시장은 지능정보사회 시책이나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부서는 클라우드컴퓨팅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과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 사용 수요를 매년 조사하여 실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지능정보화부서는 주관부서의 클라우드컴퓨팅 사용 요청에 대해 행정적·재정적·기술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4장 지능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

제16조(정보격차의 해소 추진) ① 시장은 시민들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능정보제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정보격차로 인해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시민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정보격차 해소교육”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교육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에 시설·장비·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 ①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해소를 위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센터(이하 “대응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대응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에 대한 상담 및 치유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해소에 관한 교육·홍보
3.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장 보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구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수립된 대구광역시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제4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구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6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정보화추진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지능정

보화추진위원회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구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6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대구광역시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위원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지능정보화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④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구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7조에 따라 임명된 정보화책임관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대구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9조”를 “「대구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12조”로 한다.

관 계 법 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립·확정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역량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지역·도시에 대하여 행정·생활·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이하 “지역지능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할 수 있다.

제1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지능정보화 및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인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6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③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지능정보제품”이라 한다)를 설계, 제작, 가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고령자 등이 별도의 보조기구 없이 지능정보제품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능정보제품이 보조기구와 호환될 수 있게 노력하여야 한다.

제49조(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지원)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50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정보격차해소교육”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52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센터(이하 “대응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이 없으므로 미첨부 1호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 유성필